

사이버 학폭 심각...교육부 “나 몰라라”

광주 11.5%, 전남 10.6%...전남 감소, 광주 증가 윤영덕 “사이버 특수성 감안한 예방 체계 마련해야”

코로나19 이후 전국 초·중·고의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이 병행 실시되는 동안 사이버 학교폭력이 늘고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 차원의 예방 대책과 제도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교육위, 광주 동남갑)이 지난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전체적인 학교폭력 피해 경험은 전년 대비 0.7%p 줄었지만,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8.9%에서 2020년 12.3%

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의 경우 11.4%에서 10.6%로 0.8%포인트 감소한 반면 광주의 경우 8.8%에서 11.5%로 2.7%포인트 증가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원격수업 증가로 학교폭력 발생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대표적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갈취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영상 유포 등이다.

일반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욕설을 퍼붓는 '떼까', 피해자가 대화방을 나가도 계속해서 초대하는 '카톡 감옥', 이와는 반대로 대화방에 일부러 초대한 뒤 대화방에 있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퇴장하는 '방폭'과 '데이터 셔틀' 등 유형도 다양하다.

하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와 '사이버 따돌림'만 학교폭력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과 처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4월 '학생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 처방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부는 일반 학교폭력 사안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은 가해자 처벌보다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와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여의도 클럽

김승남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 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30일 면허업 종사자들도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을 수 있도록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 단체가 자발적으로 일정한 수역에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어업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어민 고가의 탈출을 위한 그물구 확대, 자율 휴어, 어획보고 등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지키기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자원관리방안을 마련해 어업자협약을 체결·준수할 경우, 금어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집이 금지되는 기간)와 금지채취장(일정 크기 이하로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크기) 규정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어업자협약 승인 대상에 수산업법 제8조의 면허어업을 추가해 어업자협약 체결·승인·준수 및 승계 등 일련의 법률적 절차에 따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어민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수산자원이 효율적으로 보호·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농어촌 공공시설물, 지진에 취약 이형석 “내진율을 높여 대비해야”



도(道) 소재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중앙이나 시(市) 소재 공공시설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율 현황'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공공시설 내진율은 61.8%로 중앙행정기관 72.7%에 비해 10.9%p 낮았다.

또 17개 시도별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9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울산(89.6%), 서울(75.9%), 대구(74.7%), 광주(73.1%), 인천(72.5%), 부산(71.8%) 등의 순이었다.

반면, 강원도 내진율은 36.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43.1%), 경북(49.8%), 충남(52.8%), 충북(54.1%), 경남(55.9%), 전북(56.2%) 등 농어촌 기초 자치단체가 많은 지역의 내진율이 평균을 밑돌았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이 낮은 것은 내진설계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노후건물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형석 국회의원은 “농어촌 지역 공공시설물은 내진설계 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시기에 건립돼 내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그러나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농어촌 지역 건축물 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자리로 향하는 여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왼쪽)·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국회법(세종의사당 설치법) 정부이송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징벌적 손해’ 언론법 처리 무산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패키지 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재논의하기로 지난달 29일 합의했다.

여야는 특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해 정보통신망법, 신문법,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들을 함께 다루기

로 했다.

여야 9명씩 총 18인으로 구성되며,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다만 여야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처리 시한을 못박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연내 처리가 불발되는 것은 물론 내년 3월초 대신으로 이어지는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채 표류하다 결국 차기 정부 출

범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여야는 언론중재법 처리 D데이였던 지난 27일부터 수차례의 원내대표 회동을 이어가며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정안을 상정, 단독처리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고위와 의총 등 내부 마라톤 논의를 거쳐 결국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했다.

/연합뉴스

윤재갑 “농협의 장애인 인식 개선 시급”

농협중앙회가 지난 5년간 장애인 의무 고용 미이행으로 197억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에 따르면 농협의 지난 5년간 계열사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농협중앙회 2.03% ▲농협경제지주 1.92% ▲농협금융지주 1.46% ▲NH투자증권 1.37% ▲농협은행 1.69% ▲농협생명 0.87% ▲농협손해보험 1.30% 등으로 다수가 법정 의무 고용률(3.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 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면서 “농협중앙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을 지키지 못해 약 42억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다.

정부는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의 고용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달 시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윤 의원은 “매년 국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돈으로 때우고 있다”면서 “농협중앙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송갑석, 대표발의 법안 4건 본회의 통과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서갑)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친환경 산업구조 촉진법)’,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출원인 권리보호법)’ 등 4건의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탄소중립 목표 이행, 특허 출원인의 권리 보호 등 산업 특허 분야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입법 과제다.

‘친환경 산업구조 촉진법’은 글로벌 저탄소 경제에 발맞춰 국내 자원순환 및 제조업 산업을 지원 육성해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출원인 권리보호법’은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인 권리가 겪는 행정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특히 관련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개인의 지적권 활동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수소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수소법, 신재생에너지의 규모를 확대하는 전기사업법 등 2050 탄소중립을 준비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그린알로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